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음 9월 25일) 제166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서민 울리는 임대료 횡포 대책 세워야”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이 매년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올려 서민 임차인을 울리는 건설사의 횡포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

김승수 전주시장은 24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민선6기 3차년도 제2차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 취지와는 달리 임대사업자가 현행법상 임대료 인상 상한선인 5%씩 올리면서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특히 김 시장은 이날 “현행법상 임대료 인상을 상한선 5%는 사실상 획일적 인상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어 해마다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확실적인 임대료 5% 인상은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임대

**김승수 전주시장, 시장군수협의회서 “매년 임대료 5% 올려 서민 임차인들 부담 가중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2% 이내로 현실화 해야”**

료 인상을 최근 5년간 2%대를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해 2% 이내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주의 A임대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임대료를 법률이 정한 인상 상한선인 5%를 인상한데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5%를 올리면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남원의 B아파트와 익산의 C아파트의 경우에도 매년 임대료가 5%씩 오르면

서 임대아파트업체와 주민간 갈등과 분쟁이 지속되는 등 임대아파트 임대료 상승을 둘러싼 분쟁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김 시장은 “12만5,000여 세대에 달하는 국내 전·월세 가구가 매년 임대사업자로부터 일률적인 5% 임대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현행법을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해 임차인이 부담가능한 수준인 2% 범위내로 낮추고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또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 신고절차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변경) 신고 기간 조정 ▲분쟁조정신청 대상 확대 등을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주시민의 문제가 아닌 만큼,

협의회 차원에서 정치권 및 정부의 조속한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4개 단체장들은 전주시가 상정한 연간 5% 임대료 상승인상 억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다음달 2일 충북 단양에서 개최예정인 2016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서 총회안건으로 정식 건의기로 했다.

김승수 시장은 “서민 울리는 악덕 임대사업자의 횡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행정과 정치권이 나서서 파렴치한 임대사업자들의 폭리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안전상정과는 별도로 지난 12일에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관련 부처에 특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김영재 기자



시민 구조에 만전 24일 전북도와 익산시, 제7557부대, 제9585부대, 전북경찰청 등 21개 기관이 익산예술의전당에서 실시한 테러진압과 긴급구조 훈련에서 소방당국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골조차를 이용, 시민을 구조하고 있다.

**도교육청-전교조전북지부 교육부 교부금 감액에 ‘발끈’**

### “자기 말 안듣는 시도교육청에 ‘복수극’ 연출”

교육부가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을 감액, 교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전교교육청과 전교조전북지부가 발끈했다. <본보 10월 24일자 1면>

교육부는 지난 21일 전북도교육청에 통보한 예정교부에서 올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다고 통보했다.

교육부의 감액 분은 전북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인 762억원.

그러자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이 같은 차등 지급이 ‘갑질’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승환 도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해마다 일방적

인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을 평가해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항목 배점기준과 관련해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전체 100점 만점에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격성 항목’의 배점이 무려 21점이나 부여했는데, 이는 시도교육청에 무상보육 예산, 일명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김 교육감은 지적했다.

또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적시에 편성했는지 여부도 평가 항목에 집어 넣는데 대해서 “정부가 돈 한 푼 주

지 않으면서 시도교육청 평가에 집어넣은 것은 염치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대한 일방적 평가를 강행하는 숨은 의도는 시도교육청 갈등이기와 줄 세우기며, 이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두 팔을 걷었다.

전교조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말 듣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하다하다 안 되니까 ‘치졸한 복수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전북지부는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으로 당연히 중앙정부 책임”이라며 “그러나 누리과정 금액만큼 감액해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고, 교육부는 미래의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좌우되는 교육이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이번 교부금 감액은 당연히 철회해야 한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 삼성 새만금투자 MOU 사실상 없던 일로 결론

**도내 정치권-삼성과 간담회서 삼성, “중국 투자 파포화로 새만금 투자, 사업성 없어 새로운 사업 구상되면 최우선으로 꼽을 것”**

삼성의 새만금 사업 투자 백지화가 사실상 확인됐다.

전북 정치권과 삼성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확인됐다.

김광수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국회 제6 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당 전북도당 주최로 전북 국회의원들과 삼성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당에서는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해 정동영·김관영·조배숙·안호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삼성에서는 이인용 삼성전자 홍보팀장과 박상진 대외협력팀장, 손수용 삼성경제연구소 신사

입추진단 상무가 참석했다.

김광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 투자 MOU 체결의 전후의 배경 입장 관점에 대해 삼성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삼성 측의 철회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삼성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 측 박상진 대외협력 사장은 “전북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침체로 경제성 우려 중에 중국 정부의 거대한 투자가 업체를 지원하면서 과대투자가 됐다. 그로 인해 새만금 투자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그리고 지금 삼성 그룹에는 태양광사업이 없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새만금 투자가 철회된 셈이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음 새로운 사업이 구상되면 새만금을 일등으로 꼽겠다”고 삼성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편 이날 공개 진행된 회의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이후 비공개회의로 변경 진행됐다. /고민형 기자

### “개헌, 국정과제로 실무적 준비한다”

**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 3, 6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품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뉴스

전주매일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快來滿福

행복부안 · 천년도약

# “600년만의 잔치”

부안600주년 기념행사

2016. 10. 28(금) 오후5시 군청광장  
기념주간 2016.10.24(월)~10.30(일)

1416~2016